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며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비극적 사건이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으로서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2009년 1월 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으로 인해 여수·순천 일대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사살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다.

또한 2020년 1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재판에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전부가 일괄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하였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부터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어 국가차원의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25 전쟁 전후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또한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순사건은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등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힘을 모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은 지난 70여 년간 여수·순천 시민들과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였던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규명의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성동구의회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상처이자 왜곡된 역사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1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일동